
「2021-제4호(Vol. 12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1. 5. 11.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해외경제 포커스 • 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2. 재정 (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재정동향(2021.4월호) •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최근 글로벌 부채 누적 추이의 특징과 시사점 •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3. 예산·재정 관련법령 (5~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소상공인 활성화 전략 •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 •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1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 배부 •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3조원 교부 • 재정사업 지출효율화 본격 시동, 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 추진 • 고령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총 24억 지원한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발표 • 2050 탄소중립 위해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전환 시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1. 경제

출처

■ 2021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 최근 국내 경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오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됨.
- 대외 경제는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지속, 코로나19 백신 보급 가속 등의 영향으로 반등이 전망됨.
- 2021년 한국 경제는 내수 소비와 투자, 대외 교역의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되며 3% 중반대의 성장률로 반등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	2.0	-0.7	-1.2	-1.0	3.3	3.6	3.5

[바로가기](#)

■ 해외경제 포커스

한국은행

- (주요국 경제)
 - ① EU: (경제회복기금 6월말까지 비준 전망) 경제회복기금 집행을 위한 EU의 자체재원 결정에 대해 현재 18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황이며 6월말까지 모든 회원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
 - ② 일본: (기후변화 정책 대응 강화 움직임) 최근 2050년 탄소중립달성 선언('20.10월) 및 녹색성장전략('20.12월) 등을 통해 주요산업분야에 대해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③ 중국: (5월 전국 소비촉진의 달 지정) 5월을 '2021년 전국 소비촉진의 달'로 지정하고 소비박람회, 중화미식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
 - ④ 미국: (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동향) 미중 무역분쟁으로 2019년 중 급감하였던 대중 수입액이 2020년 하반기부터 크게 증가하면서 금액규모로는 무역분쟁 이전 수준을 상회, 향후에도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지속, 대중 압박 수단으로 관세가 아닌 인권·기술·환경 이슈 활용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늘어날 가능성 존재
- (국제원자재 시장) OPEC+는 4.28일 개최 예정이던 장관회의를 6.1일로 연기하고 감산계획은 종전대로 유지할 것을 결정, 최근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전망기관도 하반기 원유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

[바로가기](#)

1. 경제

출처

■ 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한국금융연구원

- 통화정책방향(한국은행 4.15.)
 -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함.
 - ②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거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임.
- 종신보험 갈아타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금융감독원 4.21.)
 - ①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
 - ②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 보장소멸, 예정이률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함.
-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한국거래소 4.27.)
 - 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함.
 - ②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 공매도 모니터링 및 적발 시스템 구축,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위반에 대한 감리를 강화함.
- 2021년 1분기 실질 GDP 1.6% 성장(한국은행 4.27.)
 - ① 2021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1.6% 성장하였으며, 이는 국제기구 및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치(0%~1%)를 훨씬 뛰어넘은 실적임.
 - ② 작년 하반기에는 수출 및 투자가 회복을 견인하였으나, 금년 1분기에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플러스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함.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월간재정동향(2021.4월호-2021.2월말 누계 기준)

기획재정부

- (총수입) 2월까지 총수입(97.1조원)은 소득세·부가세수 등의 호조와 기금운용수익 증가(국민연금 +5.3조원) 등으로 진도율 증가(+3.9%p)
* 소득세·부가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11.0)하였고, 세외수입(+1.4)·기금수입(+6.9조원)도 모두 전년대비 증가
- (총지출) 2월까지 총지출(109.8조원)은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관련 예산의 적극 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증가(+0.9%p)
* 예산(코로나, 경기회복), 기금(일자리) 모두 전년대비 증가
- (수지)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크게 개선($\Delta 26.2 \rightarrow \Delta 12.7$ 조원)
- (국가채무) 중앙정부채무는 853.6조원으로 전월대비 17.7조원, 전년대비 34.4조원 증가

[바로가기](#)

■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2021. 4. 29.(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1년 1분기 재정운용 실적 및 경제·재정운용 여건, '21년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함.
- ① 재정운용 여건: 최근 세계 경제는 뚜렷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우리경제 또한 강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음. 다만, 지표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고용 시장과 누적된 피해로 경기체감 회복 및 민생의 어려움 해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양극화 차단을 위한 재정의 역할 수행이 필요함.
- ② 2021년 1분기 재정운용 평가: 1분기 성장률 1.6% 중 경제주체로서 정부기여도는 0.3%p이며 민간소비·수출·투자부문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재정별 1분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중앙재정은 관리대상 예산 343.7조원 중 122.6조원(35.7%)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43.0조원 중 71.3조원(29.3%), 19.1조원 중 7.8조원(40.95)을 집행함.
- ③ 2021년 1차 추경 집행평가: 1차 추경은 긴급피해지원,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3대 분야 모두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음. 생계안정과 직결되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7.3조원)은 추경이 확정된 지 한달여만인 4월 28일 기준, 337만명에 4.8조원(65.8%)을 지급함.
- ④ 2021년 2분기 이후 재정 집행관리 방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일자리, SOC, 생활 SOC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상반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판 뉴딜에 7조원 이상을 상반기 내 추가 집행하는 등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상향할 계획임.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최근 글로벌 부채 누적 추이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글로벌 부채는 2019년 하반기 중 경기회복 국면에 있던 세계 경제가 2020년 들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 과정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증가함.
 - * 세계 정부부채/GDP 비율: '10년 76.9%→'19년 83.0%→'20년 98.6%
 - * 선진국 정부부채/GDP 비율: '10년 97.7%→'19년 104.3%→'20년 124.2%
 - * 신흥개도국 정부부채/GDP 비율: '10년 37.4%→'19년 52.1%→'20년 60.8%
-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부채 누적으로 부채의 지속가능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집중되고 있던 상황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채 누적 파동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증폭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글로벌 부채 누적 파동이 또 다른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줄이거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자산 총액은 861.1조원, 부채 총액은 525.12조원, 당기순이익은 0.6조원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32.8조원, 부채는 21.4조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0.1조원 감소함.
-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19년 586.3조원, 4.8% 증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쟁점사항으로 ①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사채발행액의 지속적 증가 ② 공공요금 규제 ③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있음.
- 이에 대한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①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 상향 조정 필요 ②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 강구 필요 ③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의 연계성 강화 필요 ④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제시함.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1.4.6. 개정·시행)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중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21.1.5. 공포, 4.6.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무건전성과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4년 이내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dfdaff1d86ba3c1f8353b4d1b61b8c5_img.jpg\)바로가기](#)

법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21.4.20. 개정·시행)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사업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더불어 조세 체납액 및 가산금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2b376d1a92330ab09dad2665d2f89bf5_img.jpg\)바로가기](#)

법제처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21.4.27. 개정·시행)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민간 중심의 자문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같은 영에 따른 민관 공동 협의기구인 재정전략협의회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로 개편하여 이 영에 그 운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한편,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c444627dab9fee9a1550c053ffaaaae2_img.jpg\)바로가기](#)

법제처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1.4.27. 개정·시행)

법제처

-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국방·안보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된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대 받은 필요경비나 세액감면을 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21.4.27. 개정·시행)

법제처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하여도 그 징수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가산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 특정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체납으로 수탁자의 다른 신탁재산이나 고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특정 수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한 해당 지방세를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인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며,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현대경제연구원

- (개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사회 전반에 큰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음.
- (국제 질서 변화) ①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고, '97년 교토의정서 채택과 '15년 파리협정을 통해 新기후체계를 수립함 ②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시대의 국제 질서 주도를 위해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③ 글로벌 선도기업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하며, 탄소중립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을 적극 추진 중임
- (한국의 대응) 전 세계적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함. 다만, 주요 선진국 G7 대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환경은 높게 평가되나 탄소배출 및 산업구조 등은 다소 불리한 것으로 분석됨.
- (7대 대응과제) ① 탄소중립 VS 경제성장 기로에 선 한국 ② 공존을 담보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③ 탄소중립 시대를 맞는 기업의 우려와 생존 전략 ④ 국민의 부담과 삶의 질 개선 ⑤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 ⑥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 ⑦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이 있음.(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 (시사점)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바로가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소상공인 활성화 전략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코로나19와 지역소상공인) 코로나 19로 인해 숙박·음식·운수·창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비스업 분야는 생산액이 감소하였고 소비자는 주로 모바일에 의한 온라인을 통해 소비를 하고 있음. 소상공인은 전년 대비 최소 1/3 수준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며 폐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지역소상공인 활성화 전략) ① 지역화폐의 발행규모 및 세제혜택 확대 ② 소상공인 세금납부 유예, 신규 대출 확대,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 등의 자금지원 확대 ③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④ SNS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 마련 ⑤ 소상공인의 영역 확대(건강분야) ⑥ SNS를 통한 고객 및 동료 확보 등이 있음.
- (결론을 대신하여)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 방안,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급속히 확장된 비대면 사회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쓰레기 증가 및 재활용 방안 등)과 지속가능한 사회 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런 측면에서 지역의 중심적 주체인 소상공인이 지속가능한 사회 유지에 가장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함.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 (서론)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의 변화속도가 급격한 상황으로, 인구감소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악화시켜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됨. 자치단체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정주여건과 생활기반 확충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인구소멸) 지방소멸의 개념은 인구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구감소는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나 기능이 충족되지 못하여 없어지는 것임.
-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 인구감소는 지방소멸, 출산을 하락, 1인가구 증가, 고령인구 비율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인구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될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는 사실상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회복불가능을 초래하는 등 연쇄적인 변화 양상이 일어나게 됨.
- (행·재정적 지원방안) ① 행정적 특례지원(특별법 마련, 특례군 명칭 부여, 행정기구 및 정원 책정 자율권 부여) ② 탄소세의 기금조성을 통한 특례군 지역의 재정지원 ③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위한 특례군 계정 신설 ④ 사무적 특례지원 등이 있음.
- (결론)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의 악순환 구조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전략의 선택과 실행이 요구됨.

[바로가기](#)

■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

- (주요내용) 장기적으로 남북협력 추진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인천·강원의 지역 간 연계사업*은 접경지역 균형발전, 중앙부처 남북협력사업의 연계성, 정책 기조의 부합성, 관련 사업의 제도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선정
- *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총 19개의 연계사업(인천 5개, 강원 14개)
 - (인천) 서해남북평화도로, 교동 평화산업단지, 경기만·서해5도 국제관광특구 등
 - (강원) DMZ 평화누리길, 철원 평화산업단지,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 (정책방안)
 - ① (단계별 추진방안) 연계사업은 남한부터 선(先)개발하는 초기단계,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확대단계, 남북 전역으로 확산하는 심화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
 - ②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앙부처·지자체·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국내 거버넌스 구축 및 남북협력, UN·UNESC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추진
 - ③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에 계류 중인 ‘평화(통일)경제특구법’ 등의 남북경협 관련 법안 제정 및 접경지역 균형발전 관련 지역별 맞춤형 법·제도 개선
 - ④ (소요재원 조달방안)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국비 분담비율 상향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⑤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모니터링체계 구축

[바로가기](#)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국토연구원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 (주요 내용)

- ①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이하 도시재생기금)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융자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함.
- ② 도시재생기금은 2020년에 예산안이 약 9,80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중앙 직영방식의 경직적 운영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
- ③ 일본은 보조금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경험하여 예산 지원을 축소,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미국은 CDFI 펀드를 조성하여 전국의 지역개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역맞춤형으로 지원함.

- (정책방안)

- ① (기본방향) 2단계 도시재생 뉴딜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인프라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활성화로 확장시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② (운영체계) 중앙 주도형의 방식에서 광역지자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
- ③ (재원조달 및 지원방식) 국가와 지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신협·새마을금고·지역은행 등 지역금융기관, 민간기부, 클라우드 펀딩 등 민간 분야 공동 재원 마련 모색
- ④ (시범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도시계정 신설, 광역지자체 사회적 경제기금 연계 등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지역금융자원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바로가기](#)

국토연구원

5. 뉴스브리핑

출처

■ 5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 배부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5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일정표」를 배포함.
- 5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2021년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모집(1차)’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2차)’을 공모할 계획임.
-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현재 마련 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대국민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임.
-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통한 지역균형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뉴딜펀드 운용사의 권역별 투자설명회 개최(유튜브 생중계) 예정임.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3조원 교부

- 정부는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7조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금 1.5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0.7조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함.
 - * 4.6.(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처리(안)」 국무회의 의결
- 금번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정산하는 것임.
 - *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
- 지방교부세는 경북도(2,096억원), 전남도(1,826억원), 경남도(1,480억원) 순으로 많이 배정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1,508억원), 서울교육청(876억원), 경남교육청(534억원) 순임.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재정사업 지출효율화 본격 시동, 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 추진

- 기획재정부는 2021년 4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①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세부 운영계획, ② 국정과제 주요 성과와 '22년 중점 투자 방향, ③ '22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 ④ 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 계획 ⑤ 재정현황 및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함.
 -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2 신설('21.4.27. 공포)
- 특별히,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정부의 피해지원 제도화와 함께,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5. 뉴스브리핑

출처

■ 고령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총 24억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광주 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의정부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 등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힘.
-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해 고령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함.
 - * 2019년: 청도, 완도 / 2020년: 인제, 서천, 하동, 고흥
- 올해는 지난 3월 공모를 추진(3.5.~4.5.)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에서 지원, 최종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는데, 올해 사업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 2021년: 광주 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의정부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

[바로가기](#)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발표

고용노동부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847개)의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총 1조6천225억원으로 전년(1조2천829억원) 대비 26.5% 증가했고,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도 2.85%로 전년(2.5%)보다 증가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847개 공공기관 중 544개 기관에서 전년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확대되었고, 전년 대비 구매액이 크게 증가한 곳은 한국도로공사 642억원('19년 432억원), 구매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화성시 89.4%('19년 48.6%)로 나타남.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의 상품정보를 지역·민간의 상품물에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바로가기](#)

■ 2050 탄소중립 위해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전환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 대상(전체 609개)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함.
-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남.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으로,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바로가기](#)